

한국은행, 경제상황 평가(10월) 발표

- 2025년 10월 23일 한국은행은 「2025년 10월 경제상황 평가」를 통해 최근 국내 경기흐름, 물가 동향, 수출입·경상수지, 금융·고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함.
 - 「경제상황 평가」는 분기별(1월, 4월, 7월, 10월) 발표되며,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를 분석하고 성장, 물가 등 주요 부문에 대한 한국은행의 최신 진단과 시각을 담고 있음.
- (세계 경제) 미·중 무역갈등 재점화 조짐 등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, 주요국의 정책 대응과 완화적 금융여건 등에 힘입어 성장세 둔화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평가됨.
 - 미국은 물가상승 압력과 고용 둔화로 성장률이 미국 의회예산처(CBO) 추정 잠재성장률(2.3%)을 하회할 전망
 - 유로존은 금융여건 완화 및 재정 확대 정책으로 일부 개선이 예상되나, 통상환경 악화로 회복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
 - 중국은 내수부양책과 수출국 다변화 전략을 통해 미국발 관세 충격을 완충하여, 당초 전망치에 부합하는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평가
- (국내 경제) 건설투자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. 연말로 갈수록 미국의 고율관세 영향이 확대되어 수출 둔화가 예상되나, 올해 성장률은 0.9%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임.
 - 3/4분기에는 건설투자가 안전사고로 인한 공사 지연 등으로 부진했으나, 소비심리 개선·주가 상승·소비쿠폰 지급 등의 효과로 뚜렷한 소비 회복세를 보임.
 - 4/4분기에도 내수 회복세는 이어지겠으나, 미국 관세 영향 확대로 수출 둔화가 불가피할 전망
 - 2026년에는 금리 인하 효과와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
- 경상수지는 2025년 1,100억 달러, 2026년 850억 달러 흑자로 예상되며, 반도체 경기 호조로 대규모 상품수지 흑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.
 - 다만, 철강·자동차(부품)의 대미 수출은 고율 관세(특히 자동차 25%) 부담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
 - 서비스수지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적자 폭 축소 예상
- (물가)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5년 2.0%, 2026년 1.9%로 목표 수준(2%) 부근에서 안정세 유지 전망
- (고용) 올해와 내년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각각 17만 명, 13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
 - 건설·제조업 고용은 부진하나, 서비스업 고용이 정부 일자리정책 및 소비 개선 효과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전체 고용 여건은 양호할 전망

출처: 한국은행('25.10.23)

세계 경제 동향

● 일본 9월 무역수지 2,346억 엔 적자 | 2025-10-22 일본재무성

- 2025년 10월 22일 일본 재무성은 「2025년 9월 무역통계(확정치)」를 발표함.
 - 9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.2% 증가(9조 4,137억 엔), 수입은 3.3% 증가(9조 6,483억 엔)로, 무역수지는 2,346억 엔 적자를 기록함.
 - 전년 동월(3,061억 엔 적자) 대비 적자 폭이 축소되었으나, 3개월 연속 적자 상태가 이어짐.
 - 에너지 수입 증가와 대미 수출 부진이 적자 확대 요인으로 작용
- (품목별 전년 동월 대비) 자동차·반도체장비 등 주력 품목 수출의 호조와 에너지·기계류 수입 증가가 맞물림.
 - 수출은 기계류(3.5%), 전자기기(5.5%) 등이 증가함. 반면, 철강(-7.2%), 화학제품(-3.1%) 등은 감소
 - 수입은 광물 연료(-14.4%)와 원자재(-5.1%)를 중심으로 감소하였으나, 기계류(13.8%), 전자기기(9.9%), 운송 장비(22.0%), 식품(9.9%) 등 나머지 대부분 품목에서 증가함.
- (지역별 전년 동월 대비) 북미 수출이 부진한 반면, 아시아 수출은 견조함.
 - 대미 수출은 -13.3%로 크게 감소함. 특히 자동차(-24.2%)의 수출 부진이 두드러짐.
 - 대중국 수출은 5.8% 증가하였으며, 특히 화학제품(6.8%) 및 기계류(4.2%)의 수출이 증가함.
 - 대EU 수출은 5.0%, 대아시아 전체 수출은 9.2% 증가
- 미국 시장 둔화와 관세 불확실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,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.

■ 2024년 10월~2025년 9월 일본 무역수지 추이 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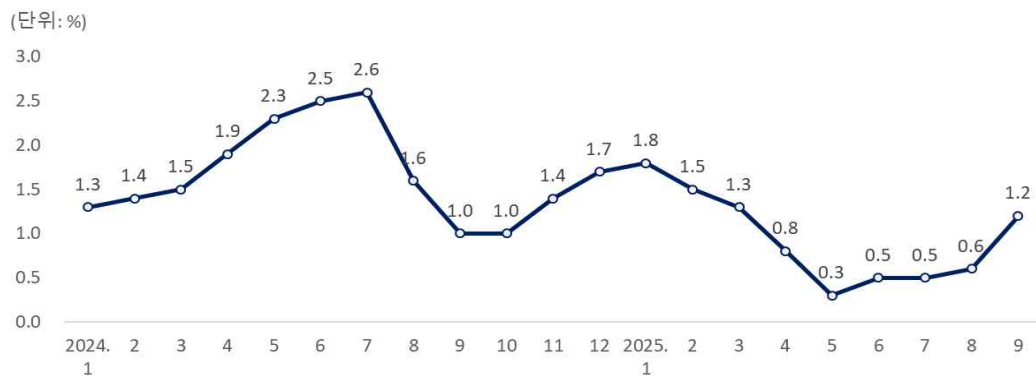


국내 경제 동향

● 9월 생산자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1.2% 상승 | 2025-10-22 한국은행; 아시아경제

- 2025년 10월 22일 한국은행은 「2025년 9월 생산자물가지수(잠정)」를 발표하였는데, 최근 3개월 중 높은 수준
 - 9월 생산자물가지수(PPI)는 전월 대비 0.4%, 전년 동월 대비 1.2% 상승하며 3개월 연속 상승세(전년 동월 대비 7월 0.5%→8월 0.6%→9월 1.2%)를 이어감.
 -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전월 대비 0.3%, 전년 동월 대비 1.0% 증가하여 상승세 유지(전년 동월 대비 7월 0.2%→8월 0.4%→9월 1.0%)
- (품목별 동향) 농산물·에너지·서비스 가격 상승이 동시에 반영되어 전반적인 오름세를 보임.
 - 농림수산품은 축산물(전월 대비 2.0%)과 농산물(0.5%) 가격 상승으로 전월 대비 0.4% 상승
 - 공산품은 화학제품(전월 대비 0.5%)과 1차 금속 제품(0.7%) 중심으로 전월 대비 0.2% 상승
 - 전력·가스·수도 및 폐기물은 주택용 전력(전월 대비 14.4%), 산업용 도시가스(5.8%) 등이 오르며 전월 대비 1.1% 상승
 - 서비스는 정보통신·방송(전월 대비 4.0%), 금융·보험(1.4%) 등이 상승하며 전월 대비 0.4% 상승
- 9월 생산자물가지수 상승은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할인 종료(0.24%p)와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 종료 (0.07%p) 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보이며, 이들 요인을 제외할 경우 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약 0.1%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.

■ 2024~2025년 9월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(전년 동월 대비) 추이 ■



세계 농업·농정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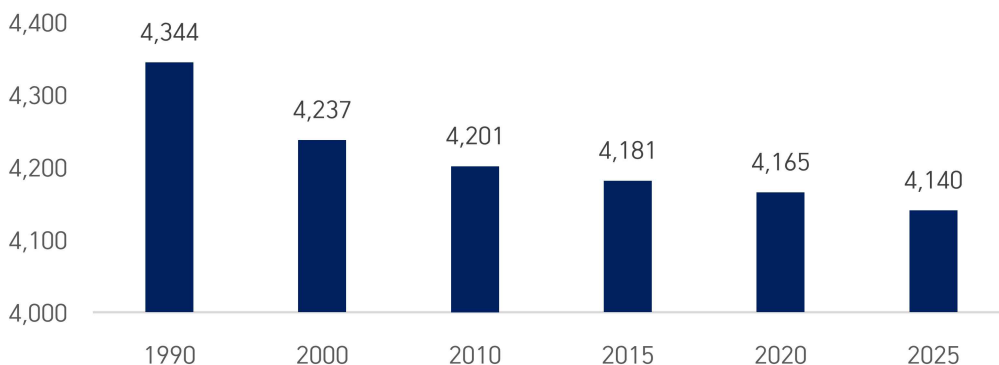
● 일본 농림수산성, 2025년산 쌀 상대거래가격 발표 | 2025-10-21 농림수산성; 일본농업신문

-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5년산 쌀의 상대거래가격과 수량을(2025년 9월 기준) 신규 발표함.
 - 농림수산성이 발표하는 쌀 상대거래가격 및 수량은 JA전농, 도·현의 경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, 지역농협, 출하 단체 및 업자(연간 거래수량 5,000톤 이상)를 대상으로 조사
 - 상대거래가격은 경매 가격이 아닌 생산자와 유통업체 간의 사전 협의를 통해 대량 할인 조건 등을 반영한 가격으로, 실제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.
 - 2025년산 9월 기준쌀의 상대거래가격은 전 품종 평균 36,895엔/60kg(현미 기준)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63%(14,195엔/60kg) 상승하여 1990년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함.
 - 반면 2025년산 쌀 거래량은 16만 287톤으로 전년 동월(25만 2,373톤)의 약 64% 수준에 머물러, 가격은 크게 올랐지만, 거래량은 줄어들었음.
- 농림수산성은 2025년산 쌀 상대거래가격 상승의 원인을 작년 대비 30~70% 높게 설정된 개산금(概算金)의 영향으로 추정함.
 - 개산금(概算金)은 농협(JA전농 등)이 농민으로부터 쌀을 수매할 때 수확 직후에 먼저 지급하는 '선지급금' 성격의 돈으로, 출하 경쟁이 치열할수록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음.
 - 일본 최대 쌀 산지인 니이가타(新潟)현 기준 2025년산 고시히카리 개산금은 3만 엔/60kg으로 전년 대비 1만 3천 엔/60kg(약 76%) 상승
- ❖ 2024년 일본의 쌀 품귀 현상 및 가격 상승으로 2025년산 쌀 집하 경쟁이 치열해졌음. 그 결과, 2025년산 쌀 개산금이 상승하고, 이로 인해 상대거래가격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됨.

● FAO, 세계 산림자원 평가 2025 발표 | 2025-10-21 FAO

- FAO는 「세계 산림자원 평가 2025(FRA 2025)」 보고서를 발표하며, 전 세계 산림 면적, 산림 훼손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최신 통계를 발표함.
 - 전 세계 산림 면적은 41억 4천만 ha로 지구 육지 면적의 32%를 차지하며, 이 중 열대림이 45%를 차지
 - 산림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, 러시아·브라질·캐나다·미국·중국 상위 5개국에 전 세계 산림의 54%가 분포
 - 이로 인해 소수 국가의 산림 관리 정책이 세계 산림 보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.
- 연간 산림 순손실(net loss)은 1990년대 1,070만 ha에서 최근(2015~2025년) 412만 ha로 절반 이상 감소함.
 - 산림 감소의 직접적 요인은 농지 확장과 인프라 건설을 위한 벌채(2015~2025년 연 1,090만 ha)이며, 동시에 조림 사업 확대·자연적 산림 확장 등으로 연 678만 ha 증가가 있었으나 상쇄에는 한계 존재
- 산림의 질적 측면에서도 우려가 존재함.
 - 원시림(primary forest)은 전체 산림의 약 3분의 1(11억 8천만 ha)에 불과하며, 1990년부터 2025년 사이 1억 1천만 ha 감소
 - 특히 열대림 지역에서 손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며, 이는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완화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로 부각
- 산림은 여전히 거대한 탄소 저장고로 기능하고 있음. 그러나 원시림과 열대림의 감소는 산림 탄소흡수능력의 약화로 이어져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함.
 - 전 세계 산림의 총 탄소저장량은 714Gt으로 추산되며, 이 중 46%는 토양, 44%는 생물량(주로 나무), 10%는 낙엽·고사목에 저장
- FAO는 전 세계적으로 산림이 여전히 큰 훼손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하면서도, 91개국이 1억 9천만 ha의 산림 복원을 약속한 것은 긍정적 신호로 평가함.
- ❖ 이번 보고서는 전 세계 산림 순손실이 과거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어 긍정적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, 원시림 감소와 열대림 훼손, 탄소흡수능력 둔화 등 여전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줌.

■ 전 세계 산림 면적 추이(단위 : 백만 ha) ■



국내 농업·농정 동향

○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 선정 | 2025-10-21 농림축산식품부

- 농림축산식품부는 '26~'27년도에 추진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, 강원 정선, 충남 청양, 전북 순창, 전남 신안, 경북 영양,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발표함.
 - 이번 시범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정과제로,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발굴하고 정책 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음.
 - 사업은 2년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, 주민들의 공익적 기여에 보상하고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을 하도록 설계됨.
- (사업 선정 과정)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, 49개 군이 신청해 71%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, 지역 소멸위험도, 지자체 추진 역량,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7개 군을 선정함.
- (지역별 특징) 선정된 7개 군은 기본소득 도입 효과 검증을 위해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됨.
 - 연천·청양·순창·남해는 일반형으로,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 연계 효과 검증에 중점
 - 정선·신안·영양은 지역자원 창출형으로, 카지노 배당금,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, 풍력발전기금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 모델 검증에 중점
- (추진 계획) 농식품부는 군별 예비 계획에 따라 사업 준비를 지원하고, 지역별 전담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임.
 - 또한 주민 삶의 질, 지역경제·공동체 활성화, 인구구조 변화 등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향후 본 사업 확산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.

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지역별 특성 ■

지역	유형	지역별 특성
경기 연천	일반형	· 농촌 기본소득 최초 도입('22, 청산면) 등의 경험과 연계하여 군 단위 확대 시 면밀한 효과 분석 기대 · 그간 접경지역 규제에 따른 지역 발전 저하, 기본소득 도입으로 인한 효과 검증
강원 정선	지역자원 창출형	· 관광·서비스업 의존도가 높은 산간 고원의 농산촌 지역 대상 정책효과 검증 · 강원랜드에 투자한 주식배당금을 주민에게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 제시
충남 청양	일반형	·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으로 '다·돌봄' 사회서비스와 기본소득 간 연계로 선순환 효과 기대 · 자본 역외 유출 방지, 관내 소비 증진 등 '스마트청양 운동'과 연계한 순환경제 활성화 검증
전북 순창	일반형	·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편 복지 확대 및 관련 정책 연계를 통한 인구 유입 등 효과 선제적 증명 · 공동체 활성화 등 농촌 지역(농가인구 42.5%, GRDP 농림어업 24.2%) 활력 제고 효과 검증
전남 신안	지역자원 창출형	· 햇빛·바람 연금(재생에너지 발전 이익 공유화)을 지자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모델 검증 · 주민 협동조합-군 간 합의(10.2)를 통해 특정 주민 향유 햇빛·바람 연금을 전체 주민에 공유 · 천여 개 섬으로 구성된 어촌지역 활성화 등 기본소득 정책효과 검증
경북 영양	지역자원 창출형	· 대규모 풍력발전단지(328MW) 조성, 풍력발전기금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 마련 · 지리적 폐쇄성이 높고 인구가 적음(1.5만 명) 농산촌 지역 대상 정책효과 검증
경남 남해	일반형	· 청년 유입 기반 기초성, 주민-소상공인-군 간 상호협력 체계와 기본사회정책 연계 시너지 · 수도권 및 대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소멸 고위험 농어촌 지역 정책효과 검증